

1.한돈협회 양돈장 악취기준 제시

2년간 133농가 분석 휴대용 악취측정기 공동구매도

2017.06.30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한돈농장에 대한 악취측정 결과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 0.5ppm 이상이면 악취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국내 한돈농장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악취관리 기준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장을 악취방지법 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트려야 할지를 수치로 명확히 함에 따라, 농장 악취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돈협회가 2015~2016년 2년간 133농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 기준인 부지 경계선 공기 희석관능법 15배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돈농장 내부(육성·비육사, 원치축사)의 공희석 배수를 1000배 이하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 0.5ppm 이하, 휴대용 악취측정기 기준 악취강도(OI) 2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표 참조>

자료 분석결과 악취 발생이 거의 없는 상위 10% 농가의 경우 암모니아 4.4ppm, 황화수소 0.07ppm에 불과했지만, 악취 관리가 서툰 **하위 10% 농가의 경우 암모니아 52.8ppm, 황화수소 1.8ppm에 달해 돼지 성장지체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돼지 생산성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50ppm 이상일 경우 자돈구간에서 약 12%의 성장지체가 일어난다. 암모니아 농도가 10~15ppm에서는 면역 기능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100~150ppm에서는 돼지의 30%가 성장 저해,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인다.

한돈협회 담당자는 "한돈농가들이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자가 악취측정을 통해 내 농장을 관리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악취관리는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농장 악취 자가측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하는 간이 악취측정기를 공동 구매한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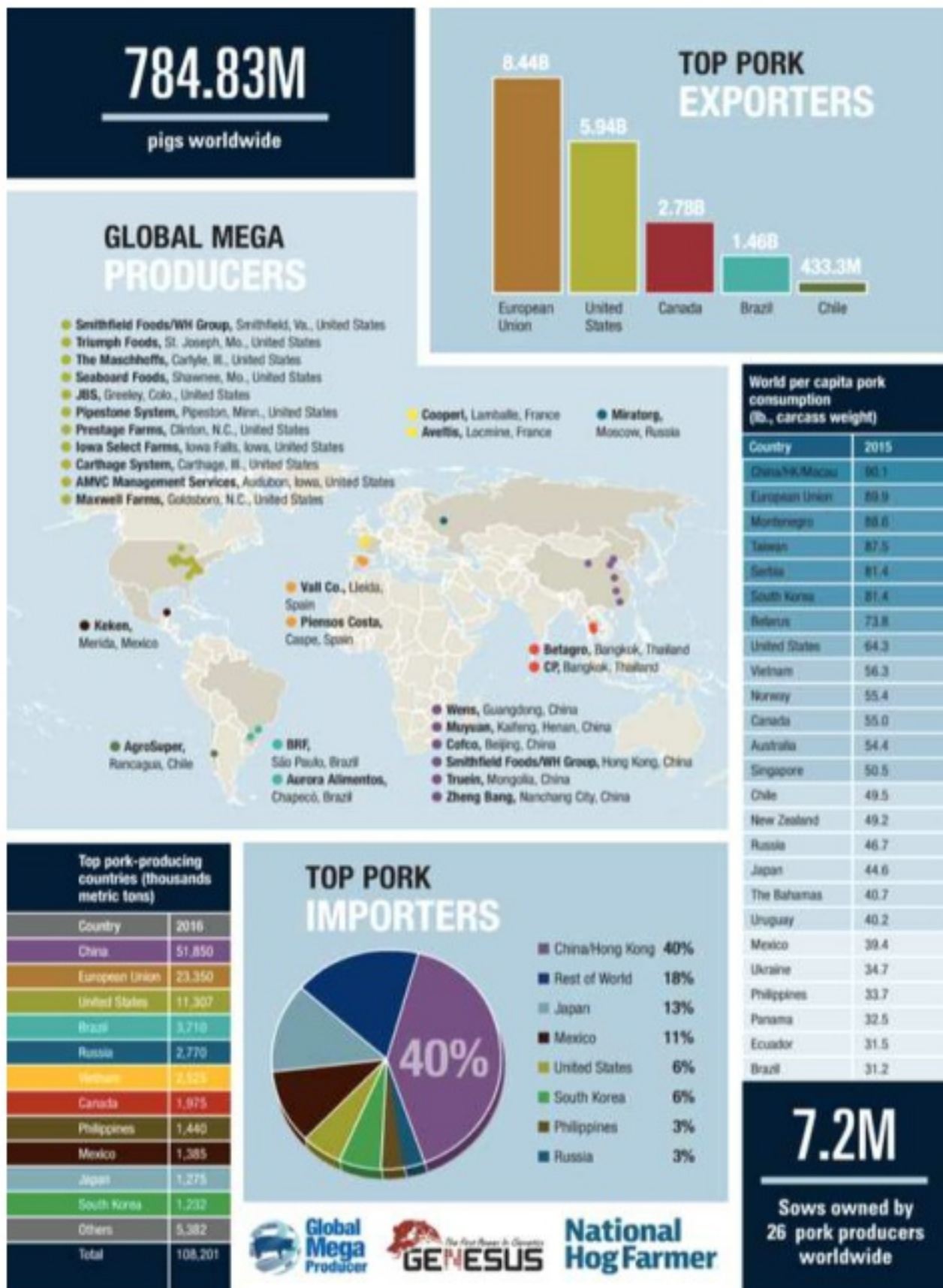
공동구매 제품은 로커스 에어텍사의 휴대용 냄새 디지털 측정기 'SKY2000-M4'다. 다양한 환경·온도에 따른 보정 측정 기능이 있고, 작동 방법이 쉽다. 10만 데이터 저장, 외부 및 밀폐 공간 중의 가스농도 측정 및 알람기능이 있다.

〈표〉 국내 양돈장 악취 발생 현황

	암모니아	황화수소	희석배수 (법정기준)	악취강도 (휴대용측정기)
상위 10%	4.45	0.069	148	2.7
상위 30%	7.17	0.096	303	5.5
평균	20.51	0.480	1169	21.1
하위 30%	37.66	1.061	2422	43.7
하위 10%	52.81	1.834	3552	64.1
농장 악취관리 기준 (한돈협회)	20ppm	0.5ppm	1000배	20OI



2. 세계돈육산업



3.인구절벽 경제·사회 위협한다 산업·자산시장 변화 불가피..획기적 대응책 절실

출처매경이코노미 |김병수 | 입력 2017.06.30

‘2750년엔 세계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던지는 경고다. 미래 세대를 짊어질 아기가 줄어들어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은 당면한 리스크다. 인구가 계속 줄면 노동, 교육, 국방,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늦추고 연착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내리막 본격화 생산·소비 동시 충격...복지부담 눈덩이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2014년에 펴낸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미국의 평균 가구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가구의 나이가 ‘45~49세’(연간 약 3만7500달러)일 때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서면 소비가 급속히 하강한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 해리 덴트는 “한국의 소비지출은 2010~2018년에 정점을 찍고, 소비가 가장 왕성한 이 연령대가 줄어드는 2018년부터 한국 경제에 인구절벽이 어른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지 않다.

실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먼저 출산을 살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잠깐용어 참조)은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낮아져 지난해엔 1.17명으로 추락했다. 이미 2002년경부터 전 세계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OECD 34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으니 자연 신생아 숫자도 급감세다.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에서 2002년 49만명으로 30

여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심리적 저지선인 30만명대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줄어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매년 감소해 2065년에 20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39만9000명에서 666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향후 50년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의 절반 수준(55.1%)으로 급감,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지칭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37년에 70명을 넘어선다. 2059년에는 100명을 초과해 이때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더 많은 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급변한다.

노년부양비만 떼서 보면 2015년 17.5명에서 2036년 50명, 2065년에는 88.6명으로 50년 만에 5배 이상 상승한다. OECD 대비로도 2015년(36.2명) 35개국 중 35위에서 2065년(108.7명)에는 1위로 올라 연금 등 사회보험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선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직 평균 연령은 2000년 38세에서 2014년 47세로 늘었고, 현대중공업도 같은 기간 40세에서 46세로 높아졌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이런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이던 신생아가 2002년 49만명으로 30여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매경DB>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이던 신생아가 2002년 49만명으로 30여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매경DB>

▶합계출산율 OECD 최저 수준

▷총부양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장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구성이 4인에서 1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2015년 518만가구인 1인가구는 2045년에는 800만가구까지 늘어난다. 이미 '혼밥·혼술' 문화는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가전 시장에선 1인용 제품이 인기다. 주택 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그 사회의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 한국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소비를 늘릴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전부터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절벽·소비절벽이 닥쳐올 게 우려되고, 그 영향으로 지금 소비위축이 나타난 것”이라 분석했다. 이미 소비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은퇴해 고령층에 진입하고 소비를 이끄는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란 것이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투자도 지지부진해진다.

A국책연구원장은 “인구절벽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장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진다. 길게 보면 한국 내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생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부진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내수 부진·산업구조 변화 불가피

▷장기 저성장 국면 들어갈 가능성도

소비뿐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로 기업, 연금, 복지 등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을 현재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체 분석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기존 정부의 예상인 2060년보다 2년 앞당긴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35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께부터 생산인구 감소에 직면하면서 동시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소득’으로 보이지만, 인구 연령층 역시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45~49살 연령대의 가파른 감소 속도가 주택 시장에 충격을 몰고 올 공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소득이 불안정하면 투자는커녕 보험이나 적금과 같이 있던 금융자산도 해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나 군대 또한 비상 상황에 놓일 수 있다. 6~21세의 학령인구는 30년 뒤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업구조 변화도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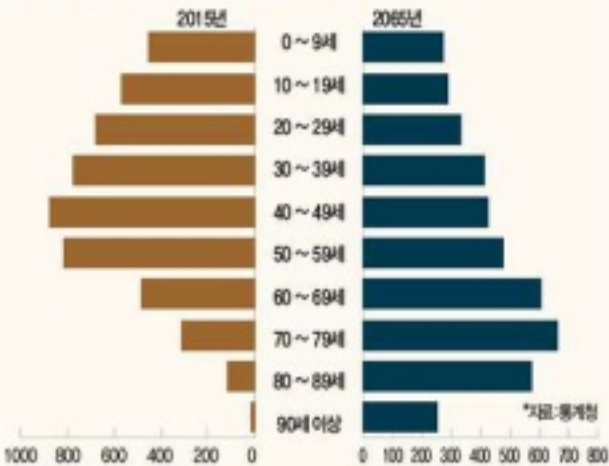
일본은 고령화 진행과 함께 철강, 자동차 산업의 국내 수요가 줄어들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전반적인 산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의 A연구원장은 “현재 중후장대형의 한국 주력산업 장기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관련 산업의 장기 생존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대응한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사업 기회를 찾고 기술 노하우를 축적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직면한 대한민국

급감하는 인구·신생아 수 (단위:명)



50년 뒤엔 70대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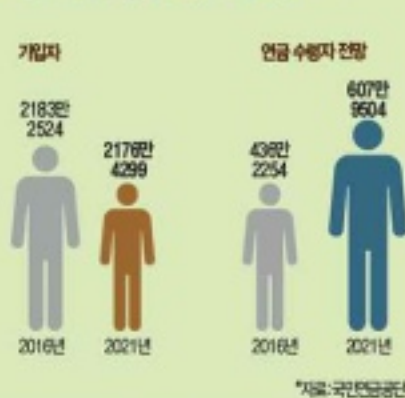
생산인구 빠르게 줄고 (단위:%)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전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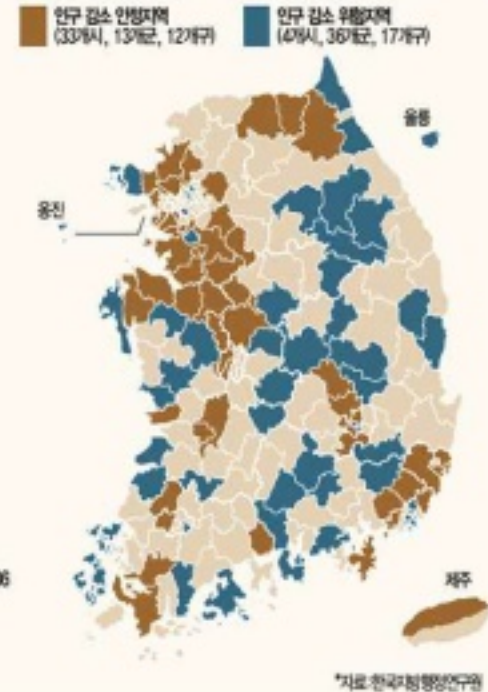
국민연금 수령자만 늘어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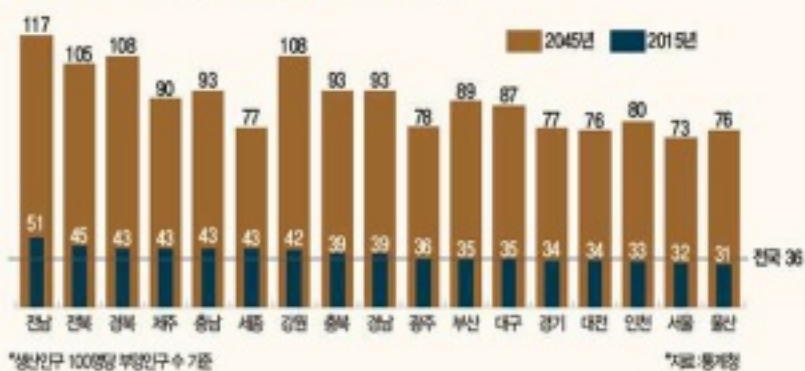
30년 뒤 서울 인구 113만명 감소 (단위:만명)



2040년 인구절벽 최고 위험지역은 부산



전남은 100명이 117명 부양해야



노동시장 유연화도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연화는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쉬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의 근로자가 노동 연한을 연장하거나 은퇴 이후 본인이 은퇴 이전에 주로 했던 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인력 수급 환경도 당연히 달라진다. 인구가 줄면서 고급 전문인력 시장에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동시장 전체에선 고령화로 인한 시장 축소와 은퇴자 재취업으로 신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도 예상 가능하다.

정부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여년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함께 저출산 해소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접어든 나라를 벤치마킹해 인구 감소에도 생산과 소비를 유지할 방안을 찾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 가격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토론했다.

잠깐용어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가임기간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출산율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특별취재팀 = 김병수(팀장)·김경민·정다운·나건웅·김기진 기자 / 그래픽 : 신기철]

4. 공장식 가축 사육은 필요악일까요?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환경) 꿈결 책 레시피 2015.04.16.

■ 주제 열기

‘공장식 가축 사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장식 가축 사육이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축산물을 최대한 빨리 생산해 내고자 가축들을 감정도 없고, 고통도 느낄 수 없는 공장의 물건처럼 대하는 사육 방식을 가리키지요. 공장식 사육을 당하는 가축들은 비좁은 축사에 갇혀 밀집 사육되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시달리곤 합니다.

공장식 사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육 방식이 가축의 생명 존엄성을 훼손할뿐더러 가축의 몸에 투여되는 성장 촉진 호르몬 및 항생제가 결국 소비자인 인간의 건강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별다른 경제적 부담 없이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데는 공장식 가축 사육을 통해 대량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덕이 큼니다. 따라서 식량으로 길러지는 가축의 행복과 복지까지 신경 써 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가축의 공장

식 사육은 인간의 건강과 육구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지요. 여러분은 공장식 가축 사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세상 들춰보기

2013년 5월, 녹색당과 동물 보호 시민단체 '카라'는 우리나라 축산법이 가축의 공장식 사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산 채로 매장당해야 했던 수많은 가축의 생명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시민 1,12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지요.

우리나라 가축의 밀집 사육 정도는 어떠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수는 증가했지만, 가축 사육 농가의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축이 증가하면 가축 사육 농가도 함께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농가의 수가 줄어든 대신 농가당 사육 규모가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닭은 한 농가당 사육 마릿수가 1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산란계 6천 400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으며, 이 닭들로부터 하루 평균 약 3천 800만 개의 달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배터리식 닭장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식 닭장은 철장으로 만든 닭장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식 닭장을 아파트식 닭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보통 가로세로 50cm의 닭장 하나당 암탉 6~8마리가 사육되는데, 평생 날개 한 번 제대로 펴 보기 어려울 만큼 협소한 공간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배터리식 닭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수의 닭을 키울 수 있으며, 그 알들이 자동으로 한곳에 모이게 되므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활동량이 적어 자연히 사료 섭취도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 부수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지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배터리식 닭장의 도입이 점차 확산되어 현재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의 95%가 배터리식 닭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집 사육은 가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한 최악의 가축 전염병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 구제역으로 349만 마리의 돼지가, 조류독감으로 647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산채로 매몰되었으며, 직접적인 피해액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라 밀집 사육 방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2년부터는 단위 면적당 사육 가축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적정 사육 가축 수는 30평당 소 20마리, 송아지 40마리, 돼지 125마리, 바닥에서 키우는 닭 910마리, 배터리식 닭장에서 키우는 닭 2천 마리 이하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가축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마저 없었던 시절에는 단위 면적당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가축들이 키워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

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의 연간 육류 소비량을 조사한 자료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해 1인당 달걀 소비량은 3배,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8배, 닭고기 소비량은 9배, 우유 소비량은 12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달걀과 우유, 육류의 소비량이 늘어나게 된 데는 축산물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발전해 온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 도입의 효과가 큼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분명 공장식 가축 사육은 토지 이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가진 가축을 기르는 일조차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추구하게 되어 생명 윤리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이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그렇다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없는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단> 한돈산업의 비전은 무엇인가?

· 안 기홍 (축산신문 2016.08.26.)

비전이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미래에 어떠한 기업(산업)이 되고 싶은가를 나타낸 조직구성원의 소망이다. 즉, 비전은 '기업(산업)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산업)상'이며, 사회 속의 기업(산업)위상과 미래를 향한 기업(산업)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업(산업)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산업) 비전은 기업(산업)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산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실성 있고 믿을만하며, 매력적인 조직의 미래상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원들에게 이상향, 꿈을 제시해야 한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산업)의 미래와 함께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비전의 필요성은 돈육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자조금위원회(NPB)가 지난 2014년 11월3일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사람, 돼지와 지구에 초점을 맞춘 '2020 전략 계획'을 소개했다. **1년 이상 기획과 구상을 거쳐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NPB는 자국돈육산업의 비전(Vision)으로 '지속적인 협력으로 사람과 돼지와 지구환경에 적합할 뿐 만 아니라 미국돼지고기가 세계의 단백질로서 선택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3대 목표도 내놓았다.

소비자 신뢰 구축(지속가능 경영 성과 지표 보고와 이산화탄소배출량과 물소비량 5% 감축 등)과 지속 가능한 생산에 집중(PRRS의 연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감축, 작업자 안전 벤치마킹 데이터베이스의 참여 50% 확대 등), 소비자의 수요증진(내수 1%증가, 수출 122만톤 목표등)이 그것이다.

일본양돈생산자협회(JPPA) 역시 지난 2013년 자국양돈의 비전을 선언했다.

JPPA는 향후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중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목표아래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확대와 함께 유대를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JPPA가 제시한 비전은 '자연 환경과 조화, 사회와 융합, 매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쁨과 내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양돈 산업 실현'이 골격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돈 산업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양돈 산업 △사랑받는 양돈 산업이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와함께 일본 양돈산업의 5대 기본 방향으로 △국제화에 대응(WTO, FTA, 수출입국동향 분석 등)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질병, 위생 대책과 규제 완화 추진) △유통 합리화(도축 비용경감과 부산물비용과 활용) △전업종사자의 확보와 육성 △양돈의 사회적 역할확대(환경, 식품리사이클, 동물복지, 食育먹거리교육)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양돈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비전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가운데 부경양돈농협은 '협동조합을 넘어,고객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동반자가 된다'는 미션하에 'NO.1협동조합으로 가는 EPIC WAY 2020'라는 비전을 선언했다.

부경양돈농협은 4가지의 구체적인 전략목표도 제시했다.

E(Ecology)-경영부문(환경) : 친환경 인증획득 100%/P(Pork)-산업부문 사업부문별 시장점유율 1위/E(Enovation)-조직화부문 당기순이익1위/C(Customer)-서비스부문 고객불만 '제로', 조합원이용율 100%가 그것이다.

여기에 경영이념과 미래상,인재상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한돈산업 전체의 비전**은 무엇이 돼야 할까.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생산국이며 수출국인 미국, 그리고 최대 수입국이며 육류 선진국인 일본의 비전과 사례를 보면, 소비자중심, 가치중심, 지구환경중심의 변화 트렌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한돈업계도 전면 개방화시대에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기 위한 첫 과제로 '비전 만들기' 를 제안한다.

그동안 FTA개방 대책, 질병대책 등 현안과제 해소에 집중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젠 다소 숨을 고르면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비전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한다.

좀 거창할수 있지만 예를들어 '**한돈인의 행복과 고객의 만족**'은 어떨까.

여기서 '한돈인' 이란 직접 양돈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물론, 직원, 관련산업 종사자자 모두를 포함한다. '고객'은 1차고객인 유통과 2차고객인 매장 판매원,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를 아우르는게 당연할 것이다. 여기에 비전과 목표 등을 보다 구체화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2020 또는 2025년 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T/F팀 가동을 제안해 본다.

미래 식량백서 '우리 뭐 먹고 살지?'

Special

인류의 굶주림, 미래에는 덜 먹지?

미래 식량으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식용 곤충, 인조고기 등이다. 하지만 미래 식량을 개발하는 것보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육류 소비만 줄여도 곤충이니 인조고기니 하는 것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미래 식량을 개발하는 것도,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정수기 버튼만 누르면 팔팔 쏟아져 나오는 물, 냉장고를 열면 언제나 있을 것만 같은 음식, 심지어 인식조차 못 하는 공기까지도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구에 머무르는 동안 마주하는 것들이 조금은 소중하고 애뜻해지지 않을까.

글 백진선

지구온난화 주범이 소?

인구 증가와 함께 계속되는 이상기후도 식량 생산을 위협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온이 2℃ 높아지면 쌀 생산량은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이상기후 현상은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되는데, 이 문제는 놀랍게도 산업화보다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소가 배출하는 방귀와 트림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3억만 마리의 소가 1년간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무려 7000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소라면, 쇠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경작지와 물 공급량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 식량 공급 위기

널쳐나는 음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고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인구는 약 73억 명이며 2030년에는 85억 명, 2050년에는 9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약 10억 헥타르의 경작지가 더 필요하다. 10억 헥타르는 대략 미국 국토와 맞먹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크기의 약 100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구에는 그만큼 넓이의 유향 경작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작농 가능한 토지의 80% 이상을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